

컬렉션 해제: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이지윤(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 연구원)

1. 들어가며

2021년 8월 무렵, 언론을 통해 영화관의 불황 문제가 보도되었다. 2021년에 영화관이 맞이한 불황의 원인은 무엇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객 감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진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및 영화관 입장 시간제한 등에 의한 매출 하락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무렵에 알려진 서울극장 폐업 소식 역시 이 같은 영화관 불황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영화관 불황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슬그머니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스크린쿼터’ 문제였다.

스크린쿼터는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극장에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자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66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서울과 부산 개봉관을 대상으로 2개월에 1편 이상(=연간 6편 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되 서울 개봉관은 90일, 부산 개봉관은 60일 이상 상영해야 했다. 이후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1970년에 4개월에 1편 이상(=연간 3편 이상), 총 상영 일수 30일 이상으로 축소되었다가 1973년에는 연간 상영 일수의 1/3(=121일) 이상, 1985년에는 연간 상영 일수의 2/5(=146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부터는 연간 상영 일수의 1/5(=73일) 이상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크린쿼터 관계 법령의 변화 과정은 본 문서 후반부에 첨부된 [부록1] 참조)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2021년 영화관들은 법에서 정한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쿼터를 제대로 이행할 만큼 상영할 수 있는 한국영화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¹⁾ 물론 영화관 측이 토로하는 스크린쿼터 이행의 어려움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줄곧 극장들이 호소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때마다 신문 지면에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극장 측의 입장과 스크린쿼터 확대 혹은 유지를 주장하는 제작자 측의 입장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국내 스크린쿼터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간의 스크린쿼터 담론에는 극장 측과 제작자 측의 갈등뿐 아니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제도적 움직임과 스크린쿼터를 지키려는 영화계의 저항이 포착된다.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 간 갈등의 배경에는 시장 개방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태생적으로 국내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스크린쿼터는 보호무역의 상징이었으며, 시장 개방 문제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19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를 관통하며 발견되는 스크린쿼터 담론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 중심 화두가 되었던 시대적 맥락이 존재한다.

1) “불붙은 스크린쿼터 논쟁, 영화관 ‘다 망하라는 건가’”, 《이코노믹 리뷰》, 2021.5.31.; “영화관 업계 ‘스크린쿼터 악몽 현실로… 특수관 예외 적용 필요’”, 《뉴시스》, 2021.8.23.; “비싼 영화값에 발길 줄고 스크린쿼터 암초까지… ‘극장가 고사 위기’”, 《머니투데이》, 2021.8.30. 등.

이런 점에서 본 컬렉션은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중인 자료를 중심으로, 1980년대 영화시장 개방 이후에 일어난 한국영화 보호 및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1990년대라 할 수 있지만, 본 컬렉션은 1980년대 미국영화 직배 저지 운동을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의 발원으로 바라보고, 직배 저지 운동과 관련된 자료들 역시 포괄한다. 이는 1980년대 미국영화 직배 저지 운동의 주역들이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으로 그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크린쿼터 담론이 영화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컬렉션의 이름을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라 명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중인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컬렉션은 총 211점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2022년 10월 현재). 여기에는 ①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현장을 기록하고 영화시장 개방의 본질을 알리는 목적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노래로 태양을 쏘다-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기록〉(조재홍, 1999), 〈위험한 정사, vol 2004〉(이훈규, 2004),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이훈규, 2006))를 비롯해 2004년 12월 영화진흥위원회 시사실에서 개최된 “스크린쿼터 관련 영화인 대책 기자회견” 현장을 기록한 영상 등의 비디오 자료 5점과 ② 1980년대의 미국영화 직배 저지 활동과 1990년대 이후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 현장을 기록한 사진 자료 144점, ③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배포된 전단 10점 및 ④ 영화 〈노래로 태양을 쏘다〉 및 직배 저지 집회 현장 부착 용도의 포스터 2점과 ⑤ 〈노래로 태양을 쏘다〉 보도자료 1점 그리고 ⑥ 각종 단체가 작성한 성명서, 자료집, 활동 백서, 연구 단행본 등의 문헌자료(기타자료, 정기간행물, 도서) 49점이 포함된다.

□ 자료 유형별 규모

유형	수량(점)	비고
비디오	5	DVCAM(1), VHS(1), DVD(2), DV(1)
스틸	144	
전단	10	
포스터	2	
보도자료	1	
기타자료	24	
정기간행물	5	
도서	20	
계	211	

한편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컬렉션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컬렉션은 해당 자료들을 그것이 생산된 시기별, 생산 기관별로 분류했다.

1) 자료 생산 시기별 분류는 10년 단위의 기계적 연대 구분을 피하고, 정부 변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 10년 단위의 연대 구분을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어떤 자료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과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맥락을 지닌 자료임에도 10년 단위 연대 구분으로 인해 ‘1990년대’라는 동일 범주로 분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직배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은 영화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사안에 민감히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배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변화를 염두에 두며 컬렉션 자료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컬렉션의 자료는 정부 변화를 기

준으로 ① 1기(제5~6공화국)와 ② 2기(김영삼 정부), ③ 3기(김대중 정부), ④ 4기(노무현 정부 이후) 그리고 ⑤ 시기 미상으로 분류된다.

□ 자료 생산 시기별 분류

생산 시기	수량(점)	비고
1기(제5~6공화국)	115	1981.3.~1993.2.
2기(김영삼 정부)	19	1993.2.~1998.2.
3기(김대중 정부)	66	1998.2.~2003.2.
4기(노무현 정부 이후)	10	2003.2.~
시기 미상	1	
계	211	

2) 자료 생산 기관별 분류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작성한 기관·단체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 직배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현장을 기록한 스틸 사진과 같이, 자료 생산 기관보다 자료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유의미한 정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본 컬렉션의 자료는 자료 생산 기관을 기준으로 ① 한국영화인협회 ②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영화인운동본부²⁾ ③ 스크린쿼터사수(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³⁾ ④ 스크린쿼터감시단(문화연대)⁴⁾ ⑤ 문화부⁵⁾ ⑥ 영화진흥위원회 ⑦ 영화인회의 ⑧ 기타로 분류된다.

- 2) 이에 해당하는 자료 생산 단체는 총 3개 처로, ① 미국영화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약칭 영투위), ②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 영화인투쟁위원회(약칭 영투위), ③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영화계민주화 영화인운동본부(약칭 영화인운동본부)가 그것이다. 이들 단체가 생산한 자료에 대해 본 컬렉션은 편의상 생산 기관 명칭을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영화인운동본부'로 통칭해 분류했는데, 이는 상기 3개 단체가 지닌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1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 3) 이에 해당하는 자료 생산 단체는 총 4개 처로, ①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②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③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 ④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 단체가 생산한 자료에 대해 본 컬렉션은 편의상 생산 기관 명칭을 '스크린쿼터사수(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로 통칭해 분류했는데, 이는 상기 4개 단체가 지닌 활동의 유사성 및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 4) 스크린쿼터감시단은 1993년,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협) 산하로 발족한 단체(위원장 정지영)였으나 1995년, 영협 집행부 교체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가 1996년 7월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산하로 편입, 활동을 재개하였다(공동위원장 정지영·이춘연). 2000년 3월, 스크린쿼터감시단은 명칭을 스크린쿼터문화연대로 바꿔 재출범(이사장 문성근)했다. 이런 점에서 본 컬렉션은 스크린쿼터감시단과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생산 기관 명칭을 '스크린쿼터 감시단(문화연대)'로 통칭해 분류했다.
- 5)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처(1948.11.) → 공보실(1956.2.) → 공보부(1960.7.) → 문화공보부(1968.7.) → 문화부(1990.1.) → 문화체육부(1993.3.) → 문화관광부(1998.2.) → 문화체육관광부(2008.2.)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컬렉션은 문화공보부 및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시기에 생산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편의상 생산 기관 명칭을 '문화부'로 통칭해 분류했다.

□ 자료 생산 기관별 분류

생산 기관	생산 시기	수량(점)	소계
한국영화인협회	1기	68	68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 /영화인운동본부	1기	14	14
스크린쿼터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2기	16	64
	3기	44	
	4기	4	
스크린쿼터 감시단(문화연대)	2기	3	14
	3기	9	
	4기	2	
문화부	1기	1	7
	3기	5	
	4기	1	
영화진흥위원회	3기	1	2
	4기	1	
영화인회의	3기	1	1
기타	1기	32	41
	3기	6	
	4기	2	
	시기 미상	1	
계			211

다음 장에서는 컬렉션 자료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인 ‘자료 생산 시기별’로 정부의 영화 시장 개방 입장과 정책 변화 과정을 정리하고, 영화계가 시기별로 어떠한 대응과 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해 컬렉션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제5~6공화국 시기에 영화시장 개방이라는 첨예한 문제와 함께 발화된 직배 반대 투쟁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 바람과 함께 영화계 민주화를 위한 영화진흥법 제정 투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지내며 본격화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시간이 지나고 시위를 거듭할수록 여러 사회단체 나아가 세계와 연대하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투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발견할 것이다.

2. 컬렉션 자료로 보는 시기별 운동 양상

1) 1기(제5~6공화국): 영화시장 개방과 직배 저지 투쟁

전두환, 노태우 정권인 제5~6공화국 시기(1981.3.~1993.2.)에 영화계의 주요 화제는 다른 아닌 ‘영화시장 개방’이었다. 1984년의 5차 개정 「영화법」(1984.12.31. 개정, 1985.7.1. 시행)은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제작업과 수입업을 분리함으로써 영화 제작 자유화 시대를 여는 한편 영화산업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⁶⁾ 한편 영화법 개정 이후 발효된 「영화법시행령」(1985.7.3. 개정 및 시행)에서는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종전의 연 1/3(=121일) 이상에서 연 2/5(=146일) 이상(단 문화공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으로 확대하고,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영화관에서는 외화 상영 후 반드시 한국영화를 7일 이상 상영해야 하는 교호상영제를 강화했다.⁷⁾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압력 역시 강화되어 1985년 9월 10일, 미국영화수출협회(Motion Picture Export Association of America: MPEAA)는 미 통상법 301조에 의거, 미국 무역 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한국 정부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하며 ① 외국영화 배급업자 영업 금지 규제 폐지 ② 외국 수입업자에 대한 외환 사용 규제 및 등록 예탁금(7억 원) 폐지 혹은 완화 ③ 검열 완화 ④ 스크린쿼터 폐지 등을 요구했다.⁸⁾ 이에

6) 안지혜,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영화정책(1985~2002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279쪽.

7) “영화인들 개정법 시행 앞두고 술렁”, 《경향신문》, 1985.6.4., 12면. 한편 문화공보부는 1973년 제4차 영화법 개정 이후 매년 초 영화시책을 고시, 이를 통해 연간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조정하기도 했는데, 1981년과 82년 영화시책에서는 종전 1개 극장이 240일까지 외화를 상영할 수 있었던 것을 200일 초과 불가로 수정,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165일로 확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개봉관의 경우 5일 이상 국산영화를 의무상영할 것을 고시한 바 있다. “문공부 영화시책을 보고 불황 영화계 전전긍긍”, 《경향신문》, 1981.1.16., 16면; “올해 외화 23편 수입, 문공부 82년 영화시책”, 《매일경제》, 1982.1.6., 9면.

8) “한 달간 한미영화협상, 불공정 제소 보류”, 《경향신문》, 1985.10.31., 2면; “미 영화사 한국

제1차 한미영화협상이 시작되었고, 한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되 영화법 개정을 전제로 1987년부터 외국영화사의 국내 영화업(한국 내 지사 설립을 통한 직접배급) 허용, 수입영화 쿼터 및 외화수입가 상한제 폐지, 등록 예탁금 인하(7억 원 → 5천만 원), 외화 편당 1억 원의 국산영화 진흥 자금 폐지 등을 합의했다.⁹⁾

이후 MPEAA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공정 무역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한·미 간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국내 여론은 이를 두고 “미 영화업계가 한국에 일단 발판을 굳히게 되면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¹⁰⁾ 애초 MPEAA가 한국 정부를 USTR에 제소하며 주장했던 사항 중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는 한미영화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멀지 않은 언젠가 MPEAA가 한국 정부에 다시금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본 컬렉션의 이 시기 자료 중, 당장 눈앞에 닥친 직배 문제뿐 아니라 충분히 예견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주목하는 자료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이 1987년 6월항쟁과 함께 영화계로도 퍼진 민주화 바람은 영화검열제도 폐지 및 영화진흥법 제정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안에는 항상 스크린쿼터 사수 혹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함께 하고 있었다.

특히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접 선거로 전 국민의 민주화를 향한 염원이 투영된 것이었는데, 컬렉션 자료 중 ① 전두환 정권의 미국영화 수입 개방을 규탄하고 군부독재 하의 공연윤리위원회 해체 및 사전 검열 완전 폐지 그리고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영화인에게 드리는 글 II」(1987.12.11. 작성: DZZ0001349_01)과 ② 김대중, 김영삼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후 평화민

지사 설치 허용 검토”, 《매일경제》, 1985.10.31., 3면; “미 개방 압력에 영화계 대책 부심”, 《경향신문》, 1985.11.7., 12면 등.

9) 안지혜, 앞의 글, 287쪽, <표 5-4> 참조.

10) “미 영화사, 한국 내 교두보 확보”, 《조선일보》, 1985.12.4., 3면.

주당 김대중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영화인의 글」(1987.12.14. 작성; DZZ0001350_01), ③ 평화민주당이 영화계에 배포한 영화 관련 공약문인 「평화민주당에서-이 땅의 영화인에게 드리는 글」(1987.12. 작성; DZZ0001351_01) 등의 일련의 문서들에는 한국영화의 민주화와 함께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남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다가올 새 정부에 거는 영화인들의 기대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¹¹⁾

또한 컬렉션 자료 중 이장호, 이두용, 유현목, 김수용, 정지영 등 영화감독 20인과 최금동, 이희우, 백결 등 시나리오 작가 7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1987년 12월 28일에 발족한 ‘한국영화개혁실천준비위원회(가칭)’의 「한국 영화개혁 선언문」(1987.12.28. 작성; DZZ0001352_01)에서도 창작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연윤리위원회 해산 및 영화심의 자율기구 구성, 영화진흥법 제정 등의 주장을 비롯해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이 자생될 때까지 스크린쿼터 사수 및 극장의 스크린쿼터 엄수를 위한 자체 상설 조사 기구 신설”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1985년의 제1차 한미영화협상 결과에 따라 1986년에는 영화시장 개방을 위한 영화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12월, 제6차 개정영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영화법」(1986.12.31. 개정, 1987.7.1. 시행)의 주 골자는 ① 외국인의 국내 영화업 허용 ② 국산영화진흥자금 납부제 폐지 ③ 외국 수입사에 대한 등록 예탁금(5천만 원) 규정 미적용(「영화법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이를 근거로 1988년부터 UIP를 시작으로 20세기 폭스(1988년)와 워너 브라더스(1989년), 콜럼비아 트라이스타(1990년), 월트디즈니(1993년) 등이 국내에 영업 등록을 하고 그들의 영화를 직접 배급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할리우드 직배 영화는 1988년 9월 24일, 코리아극장(서울 명동)과 신영극장(서울 신촌)에서 동시 개봉한 〈위험한 정사 Fatal Attraction〉(아

드리안 린, 1987)로, 이 영화는 UIP가 직접 배급한 작품이었다.

이를 계기로 영화인들은 본격적인 직배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 영화인들은 직접적으로 직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그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 및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로 분류된 스틸 자료 87점 대부분은 UIP의 첫 직배 영화 〈위험한 정사〉를 상영하는 코리아극장(서울 명동) 앞에서 열린 영화인들의 직배 반대 시위(1988.9.24.)와 두 번째 직배 영화인 〈더 리빙데이 라이트 007 The Living Daylights〉(존 글렌, 1987)을 상영하는 신영극장(서울 신촌, 1989.2.4.)과 동보극장(부산), 푸른극장(부산) 앞의 시위 모습(1989.3.10.), 서울 시내 개봉관으로 첫 입성한 직배 영화 〈사랑과 영혼 Ghost〉(제리 주커, 1990)을 상영하는 서울시네마타운(서울극장, 서울 종로) 앞에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모인 영화인들(1990.12.1.; 12.8.)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들이다. 또한 1989년 2월 13일,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협)가 예충회관(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개최한 ‘UIP 영화 직배 저지 범영화인 결기대회’ 및 1990년 7월 4일,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열린 ‘UIP 추방 결기대회’, 1990년 12월 1일에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열린 ‘UIP 상영 서울 시네마타운극장 규탄대회’ 등을 기록한 사진 역시 다수 포함돼 있다.

11) 특히 평화민주당이 영화인들에게 보낸 「평화민주당에서-이 땅의 영화인에게 드리는 글」(DZZ0001351_01)에는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외화 대 한국영화의 상영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해 한국영화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UIP 직배 반대
(1988.9.24., 서울 코리아극장)

관리번호 DSZT000445_01
유형 사진
형태 파일
수집처 조희문
수집연도 -



UIP영화 직배 저지
(1989.2.4., 서울 신영극장)

관리번호 DST751811_01
유형 사진
형태 파일
수집처 부산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수집연도 2019년



UIP영화 직배 저지
(1989.2.13., 서울 예충화관)

관리번호 DST751799_01
유형 사진
형태 파일
수집처 부산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수집연도 2019년



UIP 직배 반대
(1990.12.1., 서울시네마타운)

관리번호 DSZT000444_01
유형 사진
형태 파일
수집처 조희문
수집연도 -

그런데 이 시기 자료 중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자료 생산 기관’을 기준으로 ‘직배 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영화인운동본부’로 분류된 14점의 자료로, 해당 단체가 발행하고 작성한 간행물과 각종 성명서, 규탄대회 투쟁 구호와 투쟁가 가사가 정리된 유인물 및 거리 벽보 등이 있다. 이 단체는 1988년 9월 21일, 한국영화인협회 소속 감독분과위원회와 청년영화인협의회(대표 정병각, 영화법 개정을 위한 청년영화인협의회 후신)가 공동 발기하여 ‘미국영화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위원장 조문진, 약칭 영투위)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후 이내 명칭을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 영화인투쟁위원회’로 변경(1988.9.28. 추정, 약칭 영투위), 미국영화 직배 저지 투쟁을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과 연계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컬렉션 자료 중, 이들이 발간한 비정기 간행물 《우리영화》 창간호(1988.10.8. 발행; DJNK409_0001_1)는 1988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들의 영화법 개정 및 직배 저지 투쟁 경과를 정리·수록하는 한편 “[투쟁논단] 직배 저지 투쟁에서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으로 펼쳐나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직배 저지 투쟁과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의 연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¹²⁾ 한편 이듬해에 발행된 《우리영화》 2호(1989.5.22. 발행; DJNK409_0002_1)에서는 발행처 명칭이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영화계민주화 영화인운동본부’(공동대표 김정현·이장호·홍기선, 약칭 영화인운동본부)¹³⁾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영

화 직배 저지와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이 궁극적으로 영화계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영화》 2호에 수록된 “영화진흥법 쟁취,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글은 이 같은 명칭 변경 및 운동 방향성 설정이 그간의 직배 저지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직배 저지 투쟁과 법 쟁취 투쟁을 동일시하거나 이 둘을 단계론적으로 파악”해 왔다는 자기반성과 “이 둘을 영화계 민주화 투쟁의 의식적·조직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또 유기적이고 전반적인 영화계 민주화 투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영화인들 중론의 결과임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영투위는 <위험한 정사> 개봉 하루 전인 1988년 9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영화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 선언문」(DZZ0001357_01)과 「미국영화 직배상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DZZ0001358_01)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위험한 정사> 개봉일인 9월 24일에는 코리아극장과 신영극장 앞에서 직배 저지 농성을 벌였다. 1988년 9월 28일, 영투위는 2차 기자회견을 개최, 「영화시장 개방 저지하고 영화진흥법 쟁취하자!」(DZZ0001360_01)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신영극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 참가자 62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조문진 등 7인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본 컬렉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중문화운동연합 등 전국 18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영투위 지지 성명서 「현 정권과 미국영화자본과의 ‘위험한 정사’를 규탄한다」(1988.9.30. 작성; DZZ0001362_01)라는 제목의 문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10월 4일, 영투위는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UIP 사무실 앞에서 ‘미국영화 직접 배급회사 UIP 추방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영투위 성명서」(DZZ0001363_01); 「UIP 추방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투쟁 구호 및 가사 유인물」(DZZ0001364_01);

12) 1988년 10월 18일, 예술극장 한마당(대표 유인택)에서 발행한 소식지인 《예술정보》 23호(DJNK410_0001_1)에는 장선우 감독의 기고문 “미국영화 직배 상영 저지와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에 대하여”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장선우 감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배 저지 투쟁과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의 연대 및 결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분단을 넘어서고, 동구권과도 대등하게 교류하는 시대에 그 나라 대중문화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영화가 미국영화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한다는 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일인가. (...중략...) 영화인들의 투쟁은 단순히 미국영화 직배 상영을 저지하고 저질 미국영화를 몰아내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의 부끄러운 한국영화의 작태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정말 민족 대중 속에서 지지받는 영화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처음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행 영화법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영화진흥법의 제정을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장선우, “미국영화 직배 상영 저지와 영화진흥법 쟁취 투쟁에 대하여”, 《예술정보》 23호, 예술극장 한마당, 1988.10.18.

13)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영화계민주화 영화인운동본부’는 1989년 2월 20일,

한국영화감독협회(회장 권영순)와 민족영화위원회(위원장 이장호)가 공동 결성한 단체다. 한국영화감독협회는 ‘영투위’를 공동 발족한 영화인협회 소속 감독위원회 일부가 1988년 11월 30일, 영협을 탈퇴해 결성한 단체이며, 민족영화위원회는 ‘영투위’의 공동 발기단체인 청년영화인협회를 위원회의 각 소위로 흡수하여 1988년 12월 17일에 창립된 단체라는 점에서, 영투위와 영화인운동본부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UIP 추방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벽보」(DPZ000204_01)], 10월 21일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사무실을 방문해 미국영화 직배 철폐 및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해 민정당의 협조를 주문[「민정당 당사 방문에 즈음한 성명서」(DZZ0001366_01)]했고, 이튿날인 10월 22일에는 UIP를 비롯한 미국영화 직배 저지 투쟁을 호도하는 언론과 미국영화 시장 개방의 당사자인 민정당 및 주무당국을 규탄하고 영화진흥법 개정 투쟁을 결의하는 내용의 성명서[「투쟁 34일째를 맞이하며!!」(DZZ0001367_01)]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생산된 자료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문화공보부 예술1과(이하 문공부)의 서류철 「88 스크린쿼터이행현황」(DZZ0001380_01)으로, 전국 각 시도 소재 공연장에 대한 1987년도 스크린쿼터 이행 현황 및 위반 공연장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 등의 문서가 편철돼 있다. 특히 이 서류철에서는 ① UIP 직배 영화 <위험한 정사>를 상영한 서울 신영극장이 영화계의 대응(신영극장에 대한 영화 배급 중단)으로 한국영화 의무상영 및 교호 상영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공보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서류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질의”(신영 제1호, 1988.10.22.)와 이에 대한 문공부의 답변서 “질의에 대한 회신”(예일 35171-16752, 1988.11.2.) ② 1988년 4월에 발족한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산하 ‘스크린쿼터 연구조사단’이 문공부에 스크린쿼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민원 서류 “스크린쿼터 철저 실시에 관한 건”(영협(감·위)제66호, 1988.4.15.)와 이에 대해 문공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공문 “스크린쿼터 철저 실시와 관련 민원 처리”(예일 35171-6660, 1988.5.2.) 등의 문서 역시 찾아볼 수 있다.

2) 2기(김영삼 정부): 스크린쿼터감시단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영화진흥법 제정

1985년의 제1차 한미영화협상과 1987년의 개정영화법 시행이 영화시장 개방의 초석이 되고, 1988년의 제2차 한미영화협상¹⁴⁾으로 외화 프린트 별수 제한이 단계적으로 완화, 1994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으로써 한국 영화시장이 전면 개방되자, 이제 스크린쿼터제도는 한국영화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유일무이한 장치가 되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무렵부터, 영화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두고 영화인들의 투쟁 대상과 목표는 직배 저지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활동의 중심에는 1993년 1월 발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위원장 정지영)과 1993년 10월에 출범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금동·유현목·이태원·임권택·유동훈, 약칭 비대위)가 있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993년 10월 15일,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20일 추가 감경한다고 발표한 데서 조직되었다. 문체부는 영화관이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146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120~140편의 새 영화가 제작되어야 하지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1993년 8월 12일부터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여파로 제작 및 공급 가능한 한국영화의 수가 70편 내외라는 점을 20일 추가 감경 사유로 밝혔다.¹⁵⁾ 이는 기본 감경일 20일에 추가로 20일을 감경하는 것으로, 총 40일을 감경해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106일로 조정

14) 1988년 10월, 한국의 규제 완화 혹은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측의 요구로 제2차 한미영화협상이 시작되었고, ① 1989년 1월 1일부터 수입 심의용 영화필름 통관 추천제 폐지, ② 외국(수입)영화 프린트 별수 제한 완화 및 폐지(기존 10벌 제한 → 1989년 12벌 제한 → 1993년까지 해마다 +1벌 제한 → 1994년 별수 제한 전면 폐지), ③ 1989년 1월 1일부터 영화 심의 신청 편수를 기존 1회사당 1편에서 (동시) 2편으로 확대, ④ 1989년부터 기존 2단계로 돼 있는 심의 절차 소요 기간을 2주 내로 단축, 1990년 1월 1일부터는 그 과정을 1회로 간소화하는 등을 주 골자로 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되었다. 안지혜, 앞의 글, 296쪽.

15)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문체부 올해 20일 단축”, 《동아일보》, 1993.10.16., 21면.

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았다. 이에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 1993년 10월 22일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스크린쿼터감시단 사무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금동, 유현목, 이태원, 임권택, 유동훈 등 5인을 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 10월 27일에 예정된 영화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이 날 하루 모든 영화 제작 활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¹⁶⁾ 본 컬렉션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스틸 자료 16점은 모두 이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스크린쿼터감시단은 1993년 1월, 한국영화인협회 산하로 정식 발족한 단체로, 같은 해 10월에 출범한 비대위와 연대해 문제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은 매년 전국 극장 상영 실적 및 스크린쿼터 위반 실태를 조사·발표했는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컬렉션 자료 중 스크린쿼터감시단이 발간한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백서」(1994.3.10. 발간; BKR006002_03)와 「94년 스크린쿼터 관련법규 위반사례 자료집」(1995. 발간; BKR006282_01)에서 이러한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감시단은 1993년 활동백서를 통해 극장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리된 스크린쿼터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영화 상영 허위 신고

개봉관에서 외국영화를 상영하면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공연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한국영화 상영 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경우 등

16) “스크린쿼터 사수 비대위 출범”, 《경향신문》, 1993.10.24., 17면. 한편 10월 27일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는 비대위 주최 ‘의무상영 일수 축소 규탄대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영화인들은 “당국이 그동안 영화진흥 정책에는 소홀하다가 이제와서 ‘한국영화 부족하니 스크린쿼터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극장주들의 이익에만 신경 쓰는 태도”라고 규탄했다. “40일간 축소 스크린쿼터 영화인들 갈수록 거센 반발”, 《조선일보》, 1993.10.29., 16면.

2) 개봉관의 허위 동시상영 신고

개봉관에서 상영되는 외국영화 1편에 실제로는 상영하지 않는 한국영화 1편을 끼워서 동시상영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장 흔한 위반사례)

3) 동시상영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 허위 신고

동시상영을 하는 극장에서 외국영화 2편 중의 1편을 한국영화로 바꿔서 신고하거나, 2편 모두를 한국영화로 바꿔 신고하는 경우

4) 교호상영제 위반

인구 30만 이상의 ‘교호상영 의무 지역’에서 극히 형식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법을 쓴다.

가) 실제로는 직전까지 상영하는 것으로 신고한 외국영화나 다음날부터 새로 상영하기로 신고한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나) 수년 전에 상영된 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것으로 신고는 해놓고, 매표를 얹고 휴관하거나 내부 수리를 하는 경우

다) 영화 간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거나, 1-2회의 유료 전야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영화를 하루 앞당겨 상영하는 경우

라) 흔히 외국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 날 한국영화를 딱 하루 상영하는 것으로 하거나, 이틀에 걸쳐 동시상영(개봉외국영화 1, 한국영화 1)하는 것으로 공연 신고하는 경우¹⁷⁾

이 유형들 대부분은 허위 공연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후로도 장시간 계속된 극장의 고질적인 위반 행태였다. 이에 스크린쿼터감시단은 1997년 「공연법시행령」 개정 무렵, 스크린쿼터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연신고서를 매표소 앞에 게시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을 주장했고,¹⁸⁾ 실제로 이 내용은 1997년 10월에 개정된 「공연법시행령」(1997.10.2. 일부개정, 10.11. 시행)에 명문화되었다.¹⁹⁾

17) 스크린쿼터감시단,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백서」, 1994.3.10., 11쪽.

18) “공연법시행령 보완 촉구”, 《한겨레》, 1997.8.29., 15면.

19) 「공연법시행령」(1997.10.2. 일부개정, 10.11. 시행) 제15조제6항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공연기간 동안 일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필증을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이 조항은 1999년 5월 10일에 개정·시행된 「공연법시행령」에서는 삭제되었다.

한편 스크린쿼터감시단은 영화인협회 집행부가 교체된 1995년 5월 이후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7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²⁰⁾ 산하로 편입, 활동을 재개했다(공동위원장 정지영·이춘연). 컬렉션 자료 중 스크린쿼터감시단이 발간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의 중요성과 그 준수방안」(1996.7. 발간; BKR006281_01)은 감시단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산하로 편입해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표한 자료집으로, 스크린쿼터의 중요성과 위반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책을 소개하고, 1994년 전국극장연합회의 스크린쿼터 위헌심판 청구 소송²¹⁾에 대한 감시단의 견해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리했다. 또한 이 자료

집에는 감시단이 발족한 1993년부터 체제를 개편한 1996년 7월까지의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역시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1993년부터 영화인들의 투쟁 대상과 목표가 이전 시기의 ‘직배 저지’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로 집중된 데에는 앞서 언급한 1993년 10월 문체부의 ‘당해연도 20일 추가 감경 발표’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멀지 않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영화진흥법」(1996.7.1 시행)과 「영화진흥법시행령」(1996.6.29. 제정, 7.1. 시행), 「영화진흥법시행규칙」(1996.7.1. 제정 및 시행)에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에 대한 추가 감경조건이 덧붙여지면서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 일수가 축소된 까닭도 있다. 제정 「영화진흥법」(제16조) 및 「영화진흥법시행령」(제19조)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종전과 같이 연간 상영 일수의 2/5(=146일) 이상(필요시 20일 범위 내 단축 가능)으로 유지하되, 장관 재량으로 단축 가능한 일수를 군 및 인구 10만 이하 시의 경우 40일까지 확대했다. 또한 「영화진흥법시행규칙」(제23조)을 통해 매년 신정·설·추석 당일의 6일 전부터 그 당일까지의 기간 및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영화를 연속 7일 이상 상영하는 경우 한국영화 상영 일수 1일을 5/3일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극장의 경우에 20일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물론 통합전산망 사업이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에 「영화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전국통합전산망 참여 극장에 대한 20일 감경 혜택은 사실상 적용된 경우가 없었고,²²⁾ 「영화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감경 일수 총합이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제정으로 1996년 이후 영화관에 적용된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최대 감경 일수를 제외할 때 종전 126일(=146-20일)에서 106일(=146-40일)로 축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²³⁾

20)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994년 1월 28일에 창립대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외화 수입을 하지 않고 한국영화만 만들겠다는 제작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태원이 초대회장을, 황기성(황기성 사단), 이지룡(다남홍업), 박광수(박광수필름), 강우석(강우석프로덕션), 유인택(기획시대), 안동규(영화세상) 등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창립 당시 이들은 “기존 영화업협동조합은 한국영화의 제작과 외화 수입을 겸하는 회사들이 결집된 단체여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처럼 외화와 국산영화의 이해가 부딪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단체를 결성하게 된 것”이라며 “영화진흥법 등의 제정 과정에 개별 제작사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진흥책 수립에 있어서 영협이나 극장연합회와 차별되는 압력단체로서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라고 설립 취지와 역할을 밝힌 바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 28일 발족”, 《조선일보》, 1994.02.25., 16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어제 창립, 회장 이태원 씨”, 《조선일보》, 1994.03.01., 17면; “신세대 아이디어에 경험 접목, 스크린쿼터제도 개선안 마련”, 《조선일보》, 1994.03.04., 17면; “‘외화 시장 잠식 더 이상 안 된다’ 방화 제작자들 공동전선”, 《동아일보》, 1994.03.04., 21면 등.

21) 1994년 6월 23일, 서울 영등포 다복예술소극장과 충주 오스카소극장 등 극장주 2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으로, 청구인들은 영화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이 청구인들에게 한국영화를 강제적으로 상영하게 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 21일, “스크린쿼터제는 국산영화와 외화 상영 일수의 비율 외에는 영화 선택에 대한 극장주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고 그 비율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정된 영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 볼 수 없”으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는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외화 독점과 국산영화 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항은 경제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재판부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크린쿼터제 위헌 아니다”, 《한겨레》, 1995.07.23., 12면. 스크린쿼터 위헌심판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스크린쿼터감시단,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의 중요성과 그 준수방안」, 1996.7.;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화 분쟁 사례집』,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633~637쪽; 김정수, 『스크린쿼터의 추억: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변천사』, 한국학술정보, 2013, 288~300쪽 등 참조.

22) 안지혜, 앞의 글, 318쪽.

23) 「영화진흥법」(1995.12.30. 제정, 1996.7.1. 시행); 「영화진흥법시행령」(1996.6.29. 제정, 7.1. 시행); 「영화진흥법시행규칙」(1996.7.1. 제정 및 시행). 구체적인 법조문은 이 문서

3) 3기(김대중 정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부활

1993년 문체부가 발표한 스크린쿼터 한시적 축소부터 「영화진흥법」 제정(1995년) 및 시행(1996년)을 통한 감경 일수 확대까지, 김영삼 정부 시기에 취해진 스크린쿼터 축소는 컬렉션 자료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감시단과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를 발족하게 하는 등,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끌어내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영화와 문화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의 컬렉션 자료들은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영화계를 넘어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스크린쿼터 문제는 정부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에 한미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체결을 제안하면서 다시금 촉발되었다. 미국은 1998년 4월부터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5억 달러 규모의 멀티플렉스 합작 투자를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완화를 요구했다.²⁴⁾ 한-미 양국은 1998년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 무렵부터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은 신문 지면을 연일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1998년 7월 21일,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 스크린쿼터 철폐 의견을 전달하고 이튿날인 22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크린쿼터제가 오히려 영화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영화계 위기 극복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발단으로 작용해 영화인들의 본격적인 조직적 활동이 부활했다.²⁵⁾ 스크린쿼터감시단

후반부에 수록된 [부록1: 스크린쿼터제도 관계 법령] 참조.

24) “한미 통상 현안 공방 재개”, 《한겨레》, 1998.04.01., 2면; “스크린쿼터 완화하면 한국에 5억 달러 투자”, 《동아일보》, 1998.04.13., 33면.

25) “스크린쿼터제 논란”, 《조선일보》, 1998.07.23., 13면; “붕괴 비상 스크린쿼터”, 《한겨레》, 1998.07.24., 13면.

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스크린쿼터 철폐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한국영화인협회는 한덕수 본부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영화인들은 1998년 7월,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미·임권택·이태원, 약칭 비대위)를 발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²⁶⁾

비대위는 1998년 7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 사과 및 한미투자협상 대상에서 영화 부문 제외를 요구하는 ‘스크린쿼터 사수 및 망언 규탄집회’를 열고 종로에 위치한 피카디리 극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① 스크린쿼터제도는 한국영화 산업 보호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② 한국영화 제작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스크린쿼터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고(1998.7.23.)²⁷⁾,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서리는 정부 세종로청사 집무실에서 김지미, 안성기, 장미희 등의 영화인들을 만나, 관련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1998.7.30.)²⁸⁾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4일에 열린 충무로포럼과 26일 문화관광부가 영화인대표를 대상으로 개최한 한미투자협정 실무협상 설명회 자리에서 3차 실무협상(1998.11.17.~18,

26) 1998년 7월 27일,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남산동에 위치한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한미투자협정 협상 대상에서 영화 분야를 제외할 것과 ② 스크린쿼터 폐지 발언을 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스크린쿼터 철폐는 망언”, 《한겨레》, 1998.07.25., 12면; “외통부 스크린쿼터 폐지 발언에 영화계 발끈”, 《동아일보》, 1998.07.25., 13면; “스크린쿼터제 뜨거운 감자, 영화계 폐지론에 반발”, 《매일경제》, 1998.07.28., 26면; “스크린쿼터 사수대회”, 《조선일보》, 1998.07.28., 13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구성”, 《동아일보》, 1998.07.28., 14면; “스크린쿼터 폐지가 웬 말, 성난 영화인”, 《경향신문》, 1998.07.29., 14면 등.

27) “스크린쿼터제 존속돼야”, 《매일경제》, 1998.07.25., 17면.

28)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을 것, 김종필 총리서리”, 《한겨레》, 1998.07.31., 2면; “JP 스크린쿼터 해결책 모색”, 《동아일보》, 1998.07.31., 6면.

미국 워싱턴) 때 정부가 쿼터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은 더욱 거세졌다.²⁹⁾ 1998년 12월 1일, 비대위는 스크린쿼터 관련 정부 설명 및 공식 방침을 요구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하루 동안 모든 한국영화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하는 한편, 이날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우리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영화인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해지는 이 집회에 배우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용 검은 띠를 두른 자신들의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³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컬렉션 자료 중에는 이날 영화인들의 집회 모습이 기록된 사진 자료가 5점 포함돼 있다.

12월 내내 비대위를 비롯해 ‘우리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1998.12.04. 발족, 약칭 공대위)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집회와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고, 국회 문화관광위는 12월 29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스크린쿼터 유지 결의안을 채택,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1999년 1월 5일, 국회 본회의 역시 한국영화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³¹⁾ 이로써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29) “미 스크린쿼터 폐지 강력 요구”, 《한겨레》, 1998.11.25., 26면; “폐지냐... 축소냐... 현행 유지냐”, 《한겨레》, 1998.11.26., 16면;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한겨레》, 1998.12.02., 2면 등.

30) “스크린쿼터 폐지 미 압력에 강력 반발”, 《동아일보》, 1998.12.01., 21면; “스크린쿼터 폐지 협상 반발”, 《매일경제》, 1998.12.01., 2면; “스크린쿼터 폐지 논란 어떻게”, 《매일경제》, 1998.12.01., 26면; “스크린쿼터 사수 영정 시위”, 《조선일보》, 1998.12.02., 30면; “쿼터제 축소 사활 건 반대”, 《한겨레》, 1998.12.02., 26면 등.

31) “문광위, 스크린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 《동아일보》, 1998.12.30., 6면; “문광위 스크린쿼터 결의안 채택”, 《한겨레》, 1998.12.30., 2면; “스크린쿼터 유지 국회 문화위 가결”, 《매일경제》, 1998.12.31., 26면; “여 본회의 68개 법안 단독 처리”, 《한겨레》, 1999.01.06., 1면; “스크린쿼터 유지 결의안 국회 통과”, 《매일경제》, 1999.01.07., 26면; “스크린쿼터 유지 국회 결의 환영 비대위”, 《조선일보》, 1999.01.07., 19면;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 《조선일보》, 1999.01.07., 5면 등.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1998.12.1., 서울 광화문빌딩 앞)

관리번호 DSZT000138_01
유형 사진
형태 파일
수집처 조희문
수집연도 -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1998.12.1., 서울 광화문빌딩 앞)

관리번호 DSZT000141_01
유형 사진
형태 파일
수집처 조희문
수집연도 -

그러나 1999년 6월, 스크린쿼터를 2002년부터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 양국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은 재점화되었다.³²⁾ 6월 11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비대위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유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지영)를 구성하고,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40%에 이를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축소 여부는 한미투자협정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세계무역기구의 다국간 협상 내용에 맞춰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청와대 총리실과 문화부, 외교통상부에 각각 전달했다.³³⁾ 한편 비대위는 1999년 6월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동숭아트홀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저지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는데, 영화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규, 임순례 감독 등 영화인 8인이 삭발을 단행했다. 18일에는 광화문사거리에서 영화인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를 위한 범영화인 규탄대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정지영, 장선우, 박광수, 김성수, 허진호, 장윤현 등 영화감독 35인을 비롯한 영화인 100여 명이 집단 삭발 투쟁을 벌였다.³⁴⁾

이후 시위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1999년 6월 24일 광화문 빌딩 앞에서 비대위와 공대위가 연대 개최한 ‘스크린쿼터 축소 결사 저지와 굴욕적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에는 1,200여 명이 모였다고 전해진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와 공

대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은 21세기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미국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며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용단”을 주문했다. 또한 미국산 담배와 코카콜라, 미국영화 상징물을 모아놓고 미국상품 화형식을 거행했으며,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권택 감독 역시 삭발을 단행했다.³⁵⁾ 같은 시각 부산역 광장에서도 스크린쿼터 사수 부산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부산영화인 비대위)가 주최한 ‘스크린쿼터 사수 부산영화인 쫓겨대회’가 열렸고, 영화배우 박중훈, 이혜은을 비롯해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지회 및 동년필름,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³⁶⁾ 이 시기로 분류되는 컬렉션 자료 중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로 태양을 쏘다-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기록>(조재홍, 1999)과 그 밖의 스틸 사진 35점에는 이 같은 일련의 투쟁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감시단과 서울영상집단이 제작하고 비대위가 제작 후원한 <노래로 태양을 쏘다>는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개된 스크린쿼터 투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로도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대응하는 영화인들의 투쟁 역시 계속되었다. 1999년 8월 발기인대회를 열고 9월 발족한 영화인회의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운동을 펼치다 영화인들을 대변할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화계 조직이 없어 새로운 단체와 영화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단체 설립 취지를 밝히면서 오랜 시간 난항을 겪고 있는 “통합전산망, 등급심의, 스크린쿼터 등 영화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³⁷⁾ 창립 이후 영화인회의는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일환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

32) “스크린쿼터 2002년부터 단축될 듯”, 《한겨레》, 1999.06.11., 13면; “바람 잘 날 없는 충무로”, 《경향신문》, 1999.06.15., 29면.

33)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다시 불길”, 《한겨레》, 1999.06.15., 2면; “스크린쿼터 축소 규탄대회 연다”, 《조선일보》, 1999.06.18., 36면; “정부 2002년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 《한겨레》, 1999.06.19., 22면.

34)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8명 삭발 투쟁”, 《동아일보》, 1999.06.17., 21면; “영화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매일경제》, 1999.06.17., 33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 본격화”, 《한겨레》, 1999.06.17., 13면; “영화정책 향의 삭발한 강제규 감독”, 《경향신문》, 1999.06.17., 9면; “영화인들 삭발”, 《한겨레》, 1999.06.17., 13면; “스크린쿼터 축소 규탄대회 연다”, 《조선일보》, 1999.06.18., 36면;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촉구”, 《한겨레》, 1999.06.19., 1면; “근조 쉬리… 스크린쿼터 사수 삭발 시위”, 《경향신문》, 1999.06.19., 18면 등.

35) “스크린쿼터 축소 반발 확산”, 《매일경제》, 1999.06.24., 33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미감정 비화”, 《매일경제》, 1999.06.25., 39면;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결의대회”, 《조선일보》, 1999.06.25., 36면 등.

36) “스크린쿼터 사수 부산영화인 쫓겨대회”, 《부산역사문화대전》 누리집.

37) “젊은 층 중심 ‘영화인회의’ 만든다”, 《조선일보》, 1999.08.20., 37면; “영화인회의 내달 창립”, 《한겨레》, 1999.08.20., 20면.

사업회가 주관하고 문화연대, 대안공간 풀,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공동 주관한 부산 민주공원 개관 기획전인 “영화주권-문화독립展”(1999.10.16.~31.)에 참여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결합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영화인회의 창립과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션 자료 중 「영화인회의 1999년 활동관련 문서 모음 파일」(ZZ0001382_01)과 「문화주권 문화독립展」 팸플릿(BZR0007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크린쿼터감시단은 2000년 3월에 이름을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사장 문성근)로 바꾸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을 모집·발족하고 스크린쿼터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보다 대중 가까이에서 활동하며 운동의 일상화를 꾀했다. 또한 칸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세계영화인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는 컬렉션 자료로는 *The Screen Quota System in Korea &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DBZR000222_01)와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DBZB000226_01; DBZB000227_01)가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컬렉션 자료 중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문화관광부가 연간으로 발행한 『영화정책자료』 내지는 『영상정책자료』다. 김대중 정부 들어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시사할 때마다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영화정책자료』(1998.5.; BKR006098_01)와 『영상정책자료』(1999.; BKM004827, 2000.; BKM004829, 2001.7.; BKM004831, 2002.7.; BKM004832)를 통해 1988년 이후 연도별 직배 현황 및 1993년 이후 한국영화 의무 상영 일수 조정 및 이행 현황,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영화 법규 등을 소개했다.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 자료집의 성격상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화관광부가 이 같은 자료집을 통해 스크린쿼터 관련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는 데에는 그것이 지니는 시기적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4) 4기(노무현 정부 이후): 한미FTA vs. 문화 다양성 투쟁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한미투자협정 협상은 영화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이월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은 한국에 규제 개혁 추진을 요구했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고자 하는 영화계와 시민단체들에게 상황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후보 시절부터 스크린쿼터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역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부임 초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도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³⁸⁾ 하지만 영화계 및 시민단체들과 노무현 정부의 화목한 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03년 6월, 대통령과 재계인사 오찬 회동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한미투자협정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해지자, 영화인들은 서울 언론재단에 모여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결의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에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를 중단할 것과 한미투자협정 체결 거부를 촉구했다.³⁹⁾ 이후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교섭본부장과 영화인, 민간 전문가 등을 모아 비공개 스크린쿼터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부는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일 뿐 청와대가 스크린쿼터 문제에 개입하려는 뜻은 없다고 밝히며 상황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회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BIT 타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38) “이창동 장관 ‘문화재 관리 체계 허술’”, 《연합뉴스》, 2003.05.21.;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디지털타임즈》, 2003.05.23.; “이창동 문화 ‘스크린쿼터 양보 못해’… 노 발언과 배치”, 《동아일보》, 2003.06.05.; “이창동 장관 ‘스크린쿼터 조정 반대’”, 《한겨레》, 2003.06.05. 등.

39) “스크린쿼터 딜레마 재계, 노에 한국투자보장협정 체결 건의”, 《동아일보》, 2003.06.03.;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절대 사수”, 《매일경제》, 2003.06.11.; “스크린쿼터는 하루도 못 줄인다”, 《연합뉴스》, 2003.06.12.; “영화인, 스크린쿼터 수호 의지 천명”, 《전자신문》, 2003.06.13. 등.

터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으며(2003.6.17.),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2003.6.18.).⁴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영화인들과 시민단체들은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2003.7.2., 공동대표 임권택·이태원, 약칭 영화인대책위) 및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3.7.7., 약칭 공대위)를 출범, 스크린쿼터 사수 및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문화관광부 역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컬렉션 자료 중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영상정책자료』(2003.8.; BKM004833)는 이전 연도까지 발간한 자료집과 마찬가지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 직배 현황과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조정 및 이행 현황,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영화 법규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전 판들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 과정과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경제부처의 입장 등을 검토하며 스크린쿼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유지)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자료집이 발행된 2003년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창동 감독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해라는 점 그리고 이창동 장관이 여러 언론을 통해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을 견지했던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돌변했다. 장관 임명 이후로도 줄곧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을 표명했던 이창동 장관은, 항간에 장관 교체설이 돌리던 무렵인 6월 11일, 영화인대책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공보관은 “한국영화의 점유율, 국제영화 수상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주체적 정책 판단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스크린쿼터가 BIT 등 대미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WTO 체제에서 영화를 비롯한 시

청각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진다.⁴¹⁾ 컬렉션 자료 중에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기획하고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대책위가 제작 지원한 〈위험한 정사, vol 2004〉(이훈규, 2004)라는 제목의 영화가 포함돼 있는데,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워킹 타이틀이 〈섬씨 611〉이었다는 점이다.⁴²⁾ 워킹 타이틀에 적시된 ‘611’은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영화인대책위에 전달한 2004년 6월 11일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날짜가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의 제목으로 거론된 것으로 미루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영화인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조짐은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다. 무엇보다 2004년 12월, 외교통상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타당성 논의를 위한 예비실무협의를 2005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⁴³⁾, 실제 2005년 2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차 한미FTA 사전 실무 점검 협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 양국 주요 통상 현안의 해결이 상당히 진전돼야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⁴⁴⁾ 와중에 2005년 3월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가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할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영화인들에게 그는 스크린쿼터 축소 내지는 폐지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2005년 4월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무부처와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은 가중되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

40) “스크린쿼터 오늘 청와대 토론”, 《MBN》, 2003.06.12.; “청와대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 《프레시안》, 2003.06.17.; “스크린쿼터 이견 조정 본격 착수”, 《연합뉴스》, 2003.06.18. 등.

41) “이창동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할 때’”, 《머니투데이》, 2004.06.11.; “스크린쿼터 축소로 방향 선화한 배경”, 《연합뉴스》, 2004.06.11.;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경향신문》, 2004.06.11. 등.

4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다큐, 내년 1월 개봉”, 《스타뉴스》, 2004.12.29.

43) “한미FTA 협상 내달 개시, 투자협정 동시 논의”, 《한국경제》, 2004.12.09.

44) “미, ‘스크린쿼터 비릇 통상현안 진전돼야 FTA 추진’”, 《연합뉴스》, 2005.02.03.

장은 2003년 이후로 줄곧 스크린쿼터제가 시장 경제 원리를 위배하는 경쟁제한적 제도라 규정해왔던 인물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서 영화인대책위를 비롯해 ‘세계 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세문연)는 2005년 10월 유네스코(UNESCO)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역시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을 결의하는 등, 스크린쿼터로 대변되는 문화 다양성 사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했다.⁴⁵⁾

그러나 2006년 1월, 정부는 돌연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는 과천 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며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들어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 일수는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⁴⁶⁾ 한편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한국영화 현재의 실 표적 쿼터 일수 106일(146일에서 40일을 감경한 일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⁴⁷⁾ 이내 2006년 3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연간 상영 일수의 1/5(=73일)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단 기존의 감경조건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컬렉션 자료 중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이훈규, 2006)라는 제목의 작품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1월) 이후 긴박하게 움직였던 영화인대책위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영화인들의 릴레이 장외 철야농성과 광화문 1인 시위, 광화문 촛불문화제 및 영화인 삭발 투쟁 등의 시위 현상이 담겨 있다.

3.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 컬렉션은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에 대해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211점(2022년 10월 현재)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컬렉션의 자료가 제5~6공화국 시기부터 노무현 정부 이후까지 영화인들이 직배 저지·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벌인 모든 사건 기록을 망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컬렉션은 1980년대 이후 영화시장이 개방되는 과정에서 영화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그토록 지키고자 했는지에 대한 역사의 조각들이다. 컬렉션을 통해 이 같은 역사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영화인 개인의 작은 목소리가 뜻이 맞는 동지들과 모여 더 큰 울림이 되고, 고군분투하던 개개인이 서로 연대하며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과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여 년 역사의 기록이 한국영상자료원에 211점이라는 소수의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이 시기 한국의 영화운동 일면이 기록된 자료들은 지금도 수집 중이다. 더 많은 자료가 축적돼 언젠가 이 글을 수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45) “문화계,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촉구”, 《아이뉴스24》, 2005.11.07.; “문화다양성 협약을 위해 국회-문화예술인 간담회 열려”, 《조이뉴스24》, 2005.11.09.; “국회 문광위원들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결의”, 《한겨레》, 2005.11.09. 등

46) “스크린쿼터 7월부터 절반 축소”, 《연합뉴스》, 2006.01.26.; “〈모두발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연합뉴스》, 2006.01.26.

47) “문화부 스크린쿼터 조정 발표문”, 《경향신문》, 2006.01.27.

[부록 1] 스크린쿼터제도 관계 법령

연도	의무상영 일수	행정처분	단축 및 감경조건	조항 및 조문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편 이상 (2월마다 1편 이상) • 총 상영일 90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상영 상황에 따라 공보부장관 재량으로 조절 가능 	<p>「영화법」 ('66.8.3.개정, 9.3.시행)</p> <p>제19조(영화사업의 조성) ③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자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p> <p>제21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지 아니한 자</p> <p>「영화법시행령」 ('66.12.27.개정 및 시행)</p> <p>제25조(국산영화의 상영편수)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에 한한다)의 편수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 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보부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상황에 따라 총 상영 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p>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 • 총 상영일 30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25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수급 사정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 재량으로 조절 가능 	<p>「영화법」 ('70.8.4.개정, 9.4.시행)</p> <p>제25조(국산영화상영의무)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 중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p> <p>제2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지 아니한 자</p> <p>「영화법시행령」 ('70.12.23.개정 및 시행)</p> <p>제33조(국산영화의 상영의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연장의 경영자가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는 국산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를 말하며, 그 편수는 연간 3편 이상으로 하되, 4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그 상영 총 일수는 연간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문화공보부장관은 상영지역 및 영화의 수급 사정에 따라 상영 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p>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상영 일수의 1/3(=121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가능 		<p>「영화법」 ('73.2.16.개정 및 시행)</p> <p>제26조(외국영화 상영제한)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영화 상영 일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p> <p>제30조(공연장 영업정지 요구)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공연장의 경영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허가청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연장의 허가청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p>

연도	의무상영 일수	행정처분	단축 및 감경조건	조항 및 조문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상영 일수의 2/5(=146일) 이상 • 교호상영제 (인구 30만 이상 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범위 내 영업정지 처분 가능 (각 시·도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일 범위 내 단축 가능 	<p>「영화법」 (‘84.12.31.개정, ‘85.7.1.시행)</p> <p>제26조(국산영화의 상영의무)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p> <p>제30조(공연장 영업정지 요구)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공연장의 연간 국산영화 상영 일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영화 상영의무 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그 공연장의 허가청에 대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연장의 허가청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영화법시행령」 (‘85.7.3.개정 및 시행)</p> <p>제20조의3(국산영화의 상영의무) ①공연장의 경영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공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산영화의 연간 상영 일수를 2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직할시, 기타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시의 지역 안에 있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4(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영화상영 금지 및 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영화법시행규칙」 (‘85.7.5.개정 및 시행)</p> <p>제9조(국산영화와 외국영화의 교대상영 대상지역) 영 제20조의3제2항에서 “기타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인구 3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p>

연도	의무상영 일수	행정처분	단축 및 감경조건	조항 및 조문
1996	• 연간 상영 일수의 2/5(=146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 일수 20일 이내: 1일당 영업정지 1일 • 미달 일수 20일 초과: 20일까지 1일당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 1일마다 영업정지 2일 • 단, 3개월 범위 내 영업정지 처분 명령 (시장·군수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일 범위 내(군 및 인구 10만 이하 시 40일) 단축 가능 • 신청·설·추석연휴, 여름 성수기 내 7일 이상 상영시 1일을 5/3일로 계산 • 전국통합전산망 참여시 20일 감경 • 단, 총 단축 및 감경 일수 40일 초과 불가 	<p>「영화진흥법」 (‘95.12.30.제정, ’96.7.1.시행)</p> <p>제16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이하 “공연장경영자”라 한다)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p> <p>제19조(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공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설치경영허가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 일수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p> <p>「영화진흥법시행령」 (‘96.6.29.제정, 7.1.시행)</p> <p>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 및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의 공연장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의 공연장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상영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영자가 공연윤리위원회에 한국영화로 심의 신청한 공동제작영화를 상영할 경우의 한국영화 인정비율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기준 미달 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 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이하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기준 미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 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이하</p>

연도	의무상영 일수	행정처분	단축 및 감경조건	조항 및 조문
			「영화진흥법시행규칙」 (‘96.7.1.제정 및 시행)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 일수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감경 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정·설·추석 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2. 관람권 발매의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p> <p>제21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비율) ①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동일한 공연장에서 5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영 일수 중 5분의 1을 한국영화 상영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 상영 일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p>제22조(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미달 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미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일까지는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는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p> <p>제23조(연간 의무상영 일수의 감경기준) ①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상영 일수 1일을 3분의 5로 계산한다. 1. 매년 신정·설·추석 당일의 6일 전부터 그 당일까지의 7일 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여 연속하여 7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6일 전 이전부터 상영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6일 전부터 상영한 것으로 본다) 2.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사이에 연속하여 7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②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연도 중에 전국통합전산망 참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p>

연도	의무상영 일수	행정처분	단축 및 감경조건	조항 및 조문
2006	• 연간 상영 일수의 1/5(=73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 일수 20일 이내: 1일당 영업정지 1일 • 미달 일수 20일 초과: 20일까지 1일당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 1일마다 영업정지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단축·감경조건 삭제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4항) 	<p>「영화진흥법시행령」 (‘06.3.23. 일부개정, 7.1.시행)</p> <p>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6.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 상영 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 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 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 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 일수</p> <p>제15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개정 2002.5.27.>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기준 미달 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 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이하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기준 미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 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이하 ②삭제 <2006.3.23.> ③삭제 <2006.3.23.> ④삭제 <2006.3.23.> ⑤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 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상영 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2.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 일수가 11일 이상 20일 이내인 경우: 상영 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3.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 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상영 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p> <p>「영화진흥법시행규칙」 (‘06.3.23. 일부개정, 7.1.시행)</p> <p>제10조(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 기준 미달 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기준 미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일까지는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는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p>

연도	의무상영 일수	행정처분	단축 및 감경조건	조항 및 조문
2006	• 연간 상영 일수의 1/5(=73일) 이상	• 3개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등록취소 명령 (시장·군수·구청장)	• 전용상영관에 대해 20일 이내 경감 가능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06.4.28.제정, 10.29.시행)</p> <p>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p> <p>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략…) 5. 한국영화의 상영 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일수에 미달한 때</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06.10.26.제정, 10.29.시행)</p> <p>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p> <p>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 상영 일수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 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 일수 2. 한국영화 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 일수 3. 한국영화 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 일수</p>

부록2 직배 저지·스크린쿼터 사수 영화계 활동 및 대응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85.	9.10. MPEAA, 불공정 무역 행위 한국정부 제소	
	10. . 제1차 한미영화협상 진행	
1986.	12.31. 「영화법」 개정 ('87.7.1. 시행) : 외국영화사의 국내 영화업(직배) 허용	
1988.	3. . UIP, 국내 최초 현지 법인 등록	4. . 스크린쿼터 연구조사단 발족 (한국영화인협회 감독분과위원회 산하)
		9. . 한국영화업협동조합, UIP 직배 영화 상영 극장 대상 영화배급 중단 선언
		9.21. 미국영화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 발족 ¹⁾ (약칭 영투위)
	9.24. 〈위험한 정사〉 개봉 (UIP 배급)	9.24. 영화인 100여 명, 서울 명동 코리아극장 앞 직배 반대 시위
		9.28. 영투위, 서울 신촌 신영극장 점거 농성
		10.4. 영투위, '미국영화 직접 배급 회사 UIP 추방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서울 장충동 UIP 사무실 앞)
	10. . 제2차 한미영화협상 진행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89.	2.4. 〈더 리빙데이 라이트 007〉 개봉 (UIP 배급)	2.4. 영화업협동조합·영화인협회· 한국감독협회·민족영화위원회 ·영화인투쟁위원회 소속 영화인, 직배 반대 시위 (서울 신촌 신영극장)
		2.13. 한국영화인협회, 'UIP 영화 직배 저지 범영화인 결기대회' (서울 예총화관)
1990.	6.30. UIP 외화 수입 추천서 위조사건 보도	7.4. 영화인 400여 명, 'UIP 추방 결기대회' (영화진흥공사 시사실)
	12.1. 〈사랑과 영혼〉 개봉 (UIP 배급)	12.1. 한국영화인협회 등 영화인 300여 명, 'UIP 상영 서울시네마타운 극장 규탄대회' (영화진흥공사 시사실)
		서울시네마타운 항의 방문
		12.8. 한국영화인협회, 8~15일 한국영화 제작 중단 선언
		'미 직배영화 저지 결기대회' (서울시네마타운 앞)

1) 이후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 영화인투쟁위원회'(1988.9.28. 추정, 약칭 영투위) → '미국영화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영화계민주화 영화인운동본부'(1989.2.20. 약칭 영화인운동본부)로 명칭 변경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93.	10.15. 문화체육부,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한시적 20일 추가 감경(=106일) 발표	1. . 스크린쿼터감시단 출범 (한국영화인협회 산하) 10.22.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약칭 비대위)
		10.27. 비대위, '의무상영 일수 축소 규탄대회' (영화진흥공사 시사실) 27일 하루 영화제자 전면 중단
1994.	6.23. 전국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 위한심판 청구 소송	8.9. 한국영화인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위한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 개최
1995.	7.21. 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 위한심판 청구 소송 기각 결정 12.30. 「영화진흥법」 제정 ('96.7.1. 시행)	
1996.	4.1. 미, '96 USTR보고서' 의회 제출: 한국 주요 무역장벽국 지정 7.1. 「영화진흥법시행령」 및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시행: 스크린쿼터 감경조건 추가(최대 40일 감경)	7.16. 스크린쿼터감시단 재출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산하 편입)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97.	10.2. 「공연법시행령」 개정: 신고필증 매표소 게시 의무화 (10.11. 시행)	8.28. 스크린쿼터감시단·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연구소, 「공연법시행령」(안) 및 「공연법시행규칙」(안) 보완 및 시행 촉구 성명 발표: 공연신고서 매표소 앞 게시, 허위 공연 신고 처벌 규정 강화, 행정처분 기간 명문화 요구
1998.	4. . 미, 한미투자협정(BIT) 선결조건 제시: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6. .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돌입 7.21.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문화관광부 장관 면담: 스크린쿼터 철폐 의견 전달	7.24. 스크린쿼터감시단·한국영화제작가협회,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 철폐 발언 비판 성명 발표 7.25. 한국영화인협회, 통상교섭본부장 퇴임 요구 성명 발표 7.27.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약칭 비대위) 7.30. 비대위, '스크린쿼터 사수 및 망언 규탄집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98.	<p>10.26. 한미투자협정 2차 회담(서울) ~27.</p> <p>11.17. 한미투자협정 3차 협상(워싱턴) ~18.</p> <p>11.26. 문화관광부, 영화인대표 대상 한미투자협정 실무협상 설명회 개최: 정부 제안 스크린쿼터 축소 수정안 발표</p>	<p>10.2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의견서 문화관광부 제출</p> <p>12.1. 비대위, '우리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서울 광화문사거리) 1일 영화제작 전면 중단</p> <p>12.4. 우리영화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약칭 공대위) 비대위, 주한미국대사관 항의 방문단 파견 공대위,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제2차 규탄대회' (서울 광화문빌딩 앞 광장)</p> <p>12.5. 공대위, 성명서 발표</p> <p>12.11. 비대위, '한국영화 지키기-문화연대 98' 개최 (서울 동숭아트홀)</p> <p>12.29. 국회 문화관광위, 스크린쿼터 유지 결의안 채택·본회의 상정</p>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99.	<p>6.11. 2002년부터 스크린쿼터 단축 방안 한미간 논의 보도</p>	<p>1.15. 국회 본회의, 스크린쿼터 유지 결의안 통과</p> <p>2. . 비대위,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스크린쿼터 국제연대 호소</p> <p>5. . 비대위, 칸국제영화제 참석: 스크린쿼터 국제연대 호소</p> <p>6.1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유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p> <p>6.16. 비대위,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저지 투쟁 선포대회': 영화인 8인 식발 단행 (서울 동숭아트홀)</p> <p>6.17. 공대위, 성명서 발표</p> <p>6.18. 비대위,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를 위한 범영화인 규탄대회': 영화인 100여 명 집단 식발 단행 (서울 광화문사거리)</p> <p>6.23. 한국영화인 미국 방문 대표단 출국</p>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1999.		<p>6.24. 비대위·공대위, ‘스크린쿼터 축소 결사 저지와 굴욕적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 (서울 광화문빌딩 앞 광장)</p> <p>부산영화인비대위, ‘스크린쿼터 사수 부산영화인 쫓겨대회’ (부산역 광장)</p> <p>7.1. 공대위, 명동성당 앞 약식 집회 및 미국영화안보기 운동 전개</p> <p>9.18. 문화개혁시민연대(문화연대) 출범</p> <p>10.16. ‘영화주권-문화독립展’ 개최 ~31.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문화연대·대안공간 풀·스크린쿼터사수단 공동주관)</p> <p>10.27. ‘한국영화 지키는 시민영화제’ 개최 ~31. (전국 8개 대학 총학생회 주관)</p>
2000.	5. . 미, 스페셜301조 나라별 평가보고서 의회 제출: 한국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p>3.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출범</p> <p>6.3.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 발대식</p>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0.	<p>7.5. 외교통상부 기자간담회 개최: 미국과 스크린쿼터 축소 합의 완료 및 문화관광부 구체방안 마련 중 발표</p> <p>11.28.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발표</p>	
2001.	<p>3.8. 한미정상회담</p>	<p>3.2. 영화인 대표-국회 문화관광위 간담회 개최</p> <p>3.5.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긴급기자회견 개최: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발표</p>
2002.	<p>1.20. 재정경제부, 한미투자협정 상반기 내 마무리 계획 발표: 스크린쿼터 수정안 검토</p> <p>6.4. 제15차 한미재계회의 개최: 통상 관계 확대를 위한 FTA 체결 양국 건의 합의</p>	<p>1.23. 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모임(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포함 16개 단체), 성명서 발표</p> <p>1.28. 영화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영화인대표단, 외교통상부 방문 및 항의 서한 전달</p>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3.	3.26. 2003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개최: 한미투자협정 체결 및 스크린쿼터 해결 촉구	
	5.20. 미,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분야 한미협상-스크린쿼터 등 시청각 분야 개방 요구	
	6.1. 대통령, 한미투자협정 해결 방안 마련 주문	6.12. 영화인,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결의 보고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서울 언론재단)
	6.17. 청와대 기자간담회: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성 시사	6.17. 문화연대, 성명서 발표
	6.18. 대외경제장관회의: 스크린쿼터 관련 부차 이견 조정 착수 논의	7.2.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출범 (약칭 영화인대책위)
		7.9.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약칭 공대위) 영화인대책위,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 (서울 스카라극장)
	8.1. 공정위, 스크린쿼터-시장 원리 위배 경쟁제한적 규제 규정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3.	10.30. 정부, 스크린쿼터 109일 축소 방안 추진 보도	11.6.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11.19. 대통령, 영화인대책위 면담: 영화계 주장 확인 및 축소 강행하지 않을 것 발표	
2004.	2.25. 공정위, 스크린쿼터 완화 등 개선 방안 연내 마련 예정 보도	2.26.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세문연), 공정위 발언 비판 성명 발표
	4.12. 고건 국무총리, 스크린쿼터 축소 시사	5.19. 스크린쿼터문화연대·영화인 대표단, 국무총리 항의 방문
	6.11.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영화인대책위 면담: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 검토 요청	6.16. 42개 영화단체 대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조직위원,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비상회의 개최
		6.22.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결기대회' (서울 주공공이극장)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4.	7.2. 제1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서울 신라호텔)	7.2. 영화인대책위, 신라호텔 앞 집회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영화인대책위·민주노총·환경운동 연합·언론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0여 개 단체 연대
		7.14. 14일 하루 영화제작 전면 중단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 촉구 및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8.31. 영화인대책위-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 실무협의체 구성
	10.17. 공정위,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입장 표명	10.19. 영화인대책위, 공정위 반박 보도자료 배포
		10.21. 영화인대책위, 공정위원장 사퇴 촉구 집회 (과천 정부청사 앞)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거래위의 스크린쿼터 무용론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 자료 배포
		10.22. 국회 문화관광위, 스크린쿼터에 대한 공식 입장 보도자료 배포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4.	11.4.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스크린쿼터 폐지 발언	11.5. 영화인대책위, 박병원 차관보 쿼터 폐지 발언 비판 성명 발표
	11.17.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 대정부 건의문 발표	11.18. 영화인대책위, 전경련 대정부 건의문 비판
2005.		12.28.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지지 성명 발표
	2. . 외교통상부, 한미FTA 사전 실무점검 협의 착수	
	3.14. 한덕수 경제부총리 임명	
	4.4. 강철규 공정위원장, 스크린쿼터 축소 방향 정부 검토 중 발표	4.6. 영화인대책위, 공정위 발언 비판 논평 발표
		4.7. 국회 문화관광위,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5.20. 세문연,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촉구 성명 발표
		8.31. 영화인대책위, 한덕수 부총리 비공개 면담 (서울 매리어트 호텔)
		10.20.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5.	11.4.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발표	11.5. 영화인대책위, 재경부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 반대 성명 발표 11.9. 세문연·영화인대책위, 문화 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촉구 국회 문화관광위, 문화 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결의
2006.	1.26. 한덕수 부총리,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시행(7.1) 발표	1.26.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국회 문화관광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입장 표명
	1.27. 문화관광부, 기자회견 개최: 스크린쿼터 조정 발표문 발표	1.31. 전국민중연대, 성명 발표: 영화계 투쟁 동참 의지 선언 2.1.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릴레이 철야농성 투쟁' (서울 남산 영화감독협회 시사실)
	2.2. 한미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2.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서울 남산 영화감독협회 시사실) 2.4.~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릴레이 1인 시위 2.8. 영화인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회' (서울 광화문사거리)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6.		2.9. 국회 문광위-영화인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개최: 스크린쿼터 유지 법안 입법화 추진 발표 2.16.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기자회견 (서울 남산 감독협회) 부산지역 시민단체 및 영화인,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 (부산 BIFF 광장) 스크린쿼터 사수 전국 영화영상전공 학생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30개 대학, 약칭 학생대책위) 2.17.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 (서울 광화문광장) 3.2. 서울시극장협회 등 주요 상영관, 스크린쿼터 현행 일수 자율 준수 결의 3.3. 영화인대책위, 영화인 투쟁 보고대회 및 기자간담회 (서울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 3.6. 영화인대책위, 146일 장외 철야농성 돌입 (서울 광화문광장)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6.	3.7. 국무회의,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반영	3.7.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 국무회의 규탄 시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3.8.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 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19개 단체 연대
		3.11.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스크린쿼터 촛불문화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3.22. 학생대책위, '행동의 날' 선포 및 동맹휴업 돌입
	3.23. 「영화진흥법시행령」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및 감경조건 삭제 (7.1. 시행)	3.25.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문화제 개최 (인천 부평역 호프광장)
		3.28.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약칭 범국본): 영화인·농축수산 대책위·교수학술공대위·보건의료 대책위·교육부문단체위·문화예술 대책위·지적재산권대책위 등 연대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6.		4.1. 영화인대책위, '토요일밤의 문화연대 축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4.4. ~14. 영화인대책위, 범국본 주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역 순회 문화제' 동참 선언
		4.15. 범국본,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농민단체·영화인대책위 등 전국 60여 단체 참여 (서울 대학로)
		4.19. 범국본, '한미FTA 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각계인사 419인 시국선언' 발표: FTA 협상 중단·스크린쿼터 유지·평택 강제토지수용 중단 등 요구
	5.1.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영화인대책위 장외 농성장 방문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	5.17. 영화인대책위, 칸국제영화제 참석·스크린쿼터 사수 침묵시위 및 캠페인 진행
		5.21. 칸국제영화제 이사회, 한국 스크린쿼터 지지 공식 선언문 채택
6.5.	한미FTA 1차 협상 개시	6.5. ~11.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장외 철야농성 릴레이 동참 (서울 광화문광장)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6.	6.27. 정부 합동 한미FTA 2차 공청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7.1. 개정 「영화진흥법시행령」 시행: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73일)	7.1.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3일 영화제작 전면 중단 선언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개최 (서울 대학로 서울 광화문광장)
	7.10. 한미FTA 2차 협상 개시	7.3. 영화인 릴레이 1인 시위 종료: 2.4. 영화배우 안성기 ~ 7.3. 영화감독 임권택, 총 146일(172명) 진행
	7.15. 한미FTA 2차 협상 결렬	7.12. 범국민본,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7.30. 영화인대책위, 영화인 장외 ~31. 철야농성 종료(3.6.~7.30., 146일 진행) 및 철야농성 마무리 기자회견(7.31.)
		8.1. 영화인대책위, 청와대 앞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연도	배경	활동 및 대응
2006.		8.5. 학생대책위, '2006 우리 ~14. 영화 지키는 국토대장정' 발대식(8.5.) 및 해단 기자회견(8.14., 청와대 앞) 9. . 영화인대책위, 한미FTA 서명운동 개시 9.1. 영화인대책위, ~4. 베니스국제영화제 참석 및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위한 1인 시위 진행
	9.6. 한미FTA 3차 협상 개시	10.14. 영화인대책위, ~15.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및 문화다양성연대의 밤(10.14.) 및 'FTA와 문화다양성협약 그리고 스크린쿼터' 국제 컨퍼런스(10.15.) 개최
	10.23. 한미FTA 4차 협상 개시	11.22. 범국민본,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서울광장): 스크린쿼터 원상 복귀,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 미국 개방압력 반대, 노동기본권 보장, 양극화 해소 등 주장

참고자료

1. 컬렉션 자료*

[영상]

- 〈노래로 태양을 쏘다-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기록〉(조재홍, 1999)
 〈위험한 정사, vol 2004〉(이훈규, 2004)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이훈규, 2006)

[도서 (단행본 및 자료집)]

- 김정수, 『스크린쿼터의 추억: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변천사』, 한국학술정보, 2013.
 문화관광부, 『영화정책자료』, 1998.5.
 _____, 『영상정책자료』, 1999.
 _____, 『영상정책자료』, 2000.
 _____, 『영상정책자료』, 2001.7.
 _____, 『영상정책자료』, 2002.7.
 _____, 『영상정책자료』, 2003.8.
 스크린쿼터감시단,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백서」, 1994.3.10.
 _____, 「94년 스크린쿼터 관련법규 위반사례 자료집」, 1995.
 _____,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의 중요성과 그 준수방안」, 1996.7.

[간행물]

- 《예술정보》 23호, 예술극장 한마당, 1988.10.18.
 《우리영화》 창간호,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 1988.10.8.
 《우리영화》 2호,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 영화인투쟁위원회, 1989.5.22.

[기타자료]

- 문화공보부 예술1과, 「88 스크린쿼터이행현황」, 1988.
 민주문화운동연합 외, 「현 정권과 미국영화자본과의 '위험한 정사'를 규탄한다」, 1988.9.30.
 애국영화인 일동,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영화인에게 드리는 글 II」, 1987.12.11.
 영화인회의, 「영화인회의 1999년 활동관련 문서 모음 파일」.
 이 땅의 영화인들,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영화인의 글-국
 민적 민중후보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1987.12.14.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 「미국영화 직배저지 영화인투쟁위원회 선언문」, 1988.9.23.
 _____, 「미국영화 직배상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1988.9.23.
 직배저지·영화진흥법쟁취 영화인투쟁위원회, 「영화시장 개방 저지하고 영화진흥법 쟁취하자」,
 1988.9.28.
 _____, 「영투위 성명서」, 1988.10.4.
 _____, 「UIP 추방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투쟁 구호 및 가사 유인물」, 1988.10.4.
 _____, 「민정당 당사 방문에 즈음한 성명서」, 1988.10.21.
 _____, 「투쟁 34일째를 맞이하며!」, 1988.10.22.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에서-이 땅의 영화인에게 드리는 글」, 1987.12.
 한국영화개혁실천준비위원회(가칭), 「한국 영화개혁 선언문」, 1987.12.28.

[전단 및 팸플릿]

- 『문화주권 문화독립展』, 1999
 스크린쿼터문화연대, *The Screen Quota System in Korea &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2000.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2002.

* 본문에 언급된 컬렉션 자료 중 스틸을 제외한 영상 및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컬렉션 전체 자료 목록은 KMDb 내 해당 컬렉션 웹페이지를 참조할 것.

2. 단행본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화 분쟁 사례집』,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3. 누리집

《부산역사문화대전》

《국가법령정보센터》

4. 언론 보도

[1기: 1981년]

“문공부 영화시책을 보고 불황 영화계 전전긍긍”, 《경향신문》, 1981.1.16., 16면.

“올해 외화 23편 수입, 문공부 82년 영화시책”, 《매일경제》, 1982.1.6., 9면.

“영화인들 개정법 시행 앞두고 술렁”, 《경향신문》, 1985.6.4., 12면.

“미 영화사 한국지사 설치 허용 검토”, 《매일경제》, 1985.10.31., 3면.

“한 달간 한미영화협상, 불공정 제소 보류”, 《경향신문》, 1985.10.31., 2면.

“미 개방 압력에 영화계 대책 부심”, 《경향신문》, 1985.11.7., 12면.

“미 영화사, 한국 내 교두보 확보”, 《조선일보》, 1985.12.4., 3면.

[2기: 1993~1997년]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문체부 올해 20일 단축”, 《동아일보》, 1993.10.16., 21면.

“스크린쿼터 사수 비대위 출범”, 《경향신문》, 1993.10.24., 17면.

“40일간 축소 스크린쿼터 영화인들 갈수록 거센 반발”, 《조선일보》, 1993.10.29., 16면.

“한국영화제작가협 28일 발족”, 《조선일보》, 1994.02.25., 16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어제 창립, 회장 이태원 씨”, 《조선일보》, 1994.03.01., 17면.

“신세대 아이디어에 경험 접목, 스크린쿼터제도 개선안 마련”, 《조선일보》, 1994.03.04., 17면.

“‘외화 시장 잠식 더 이상 안 된다’ 방화 제작자들 공동전선”, 《동아일보》, 1994.03.04., 21면.

“스크린쿼터제 위헌 아니다”, 《한겨레》, 1995.07.23., 12면.

“공연법시행령 보완 촉구”, 《한겨레》, 1997.8.29., 15면.

[3기: 1998~1999년]

“한미 통상 현안 공방 재개”, 《한겨레》, 1998.04.01., 2면.

“스크린쿼터 완화하면 한국에 5억 달러 투자”, 《동아일보》, 1998.04.13., 33면.

“스크린쿼터제 논란”, 《조선일보》, 1998.07.23., 13면.

“붕괴 비상 스크린쿼터”, 《한겨레》, 1998.07.24., 13면.

“스크린쿼터 철폐는 망언”, 《한겨레》, 1998.07.25., 12면.

“스크린쿼터제 존속돼야”, 《매일경제》, 1998.07.25., 17면.

“외통부 스크린쿼터 폐지 발언에 영화계 발끈”, 《동아일보》, 1998.07.25., 13면.

“스크린쿼터 사수대회”, 《조선일보》, 1998.07.28., 13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구성”, 《동아일보》, 1998.07.28., 14면.

“스크린쿼터제 뜨거운 감자, 영화계 폐지론에 반발”, 《매일경제》, 1998.07.28., 26면.

“스크린쿼터 폐지가 웬 말, 성난 영화인”, 《경향신문》, 1998.07.29., 14면.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을 것, 김종필 총리서리”, 《한겨레》, 1998.07.31., 2면.

“JP 스크린쿼터 해결책 모색”, 《동아일보》, 1998.07.31., 6면.

“미 스크린쿼터 폐지 강력 요구”, 《한겨레》, 1998.11.25., 26면.

“폐지냐… 축소냐… 현행 유지냐”, 《한겨레》, 1998.11.26., 16면.

“스크린쿼터 폐지 논란 어떻게”, 《매일경제》, 1998.12.01., 26면.

“스크린쿼터 폐지 미 압력에 강력 반발”, 《동아일보》, 1998.12.01., 21면.

“스크린쿼터 폐지 협상 반발”, 《매일경제》, 1998.12.01., 2면.

“스크린쿼터 사수 영정 시위”, 《조선일보》, 1998.12.02., 30면.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한겨레》, 1998.12.02., 2면.

“쿼터제 축소 사활 건 반대”, 《한겨레》, 1998.12.02., 26면.

“문광위 스크린쿼터 결의안 채택”, 《한겨레》, 1998.12.30., 2면.

“문광위, 스크린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 《동아일보》, 1998.12.30., 6면.

“스크린쿼터 유지 국회 문화위 가결”, 《매일경제》, 1998.12.31., 26면.

“여 본회의의 68개 법안 단독 처리”, 《한겨레》, 1999.01.06., 1면.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 《조선일보》, 1999.01.07., 5면.

“스크린쿼터 유지 결의안 국회 통과”, 《매일경제》, 1999.01.07., 26면.
 “스크린쿼터 유지 국회 결의 환영 비대위”, 《조선일보》, 1999.01.07., 19면.
 “스크린쿼터 2002년부터 단축될 듯”, 《한겨레》, 1999.06.11., 13면.
 “바람 잘 날 없는 충무로”, 《경향신문》, 1999.06.15., 29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다시 불길”, 《한겨레》, 1999.06.15., 2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8명 삭발 투쟁”, 《동아일보》, 1999.06.17., 21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 본격화”, 《한겨레》, 1999.06.17., 13면.
 “영화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매일경제》, 1999.06.17., 33면.
 “영화인들 삭발”, 《한겨레》, 1999.06.17., 13면.
 “영화정책 항의 삭발한 강제규 감독”, 《경향신문》, 1999.06.17., 9면.
 “스크린쿼터 축소 규탄대회 연다”, 《조선일보》, 1999.06.18., 36면.
 “근조 쉬리… 스크린쿼터 사수 삭발 시위”, 《경향신문》, 1999.06.19., 18면.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촉구”, 《한겨레》, 1999.06.19., 1면.
 “정부 2002년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 《한겨레》, 1999.06.19., 22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발 확산”, 《매일경제》, 1999.06.24., 33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미감정 비화”, 《매일경제》, 1999.06.25., 39면.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결의대회”, 《조선일보》, 1999.06.25., 36면.
 “영화인회의 내달 창립”, 《한겨레》, 1999.08.20., 20면.
 “젊은 층 중심 ‘영화인회의’ 만든다”, 《조선일보》, 1999.08.20., 37면.

[4기: 2003~2021년]

“이창동 장관 ‘문화재 관리 체계 허술’”, 《연합뉴스》, 2003.05.21.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디지털타임즈》, 2003.05.23.
 “스크린쿼터 딜레마 재계, 노에 한국투자보장협정 체결 건의”, 《동아일보》, 2003.06.03.
 “이창동 문화 ‘스크린쿼터 양보 못해’… 노 발언과 배치”, 《동아일보》, 2003.06.05.
 “이창동 장관 ‘스크린쿼터 조정 반대’”, 《한겨레》, 2003.06.05.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절대 사수”, 《매일경제》, 2003.06.11.
 “스크린쿼터는 하루도 못 줄인다”, 《연합뉴스》, 2003.06.12.
 “스크린쿼터 오늘 청와대 토론”, 《MBN》, 2003.06.12.

“영화인, 스크린쿼터 수호 의지 천명”, 《전자신문》, 2003.06.13.
 “청와대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 《프레시안》, 2003.06.17.
 “스크린쿼터 이전 조정 본격 착수”, 《연합뉴스》, 2003.06.18.
 “이창동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할 때’”, 《머니투데이》, 2004.06.11.
 “스크린쿼터 축소로 방향 선회한 배경”, 《연합뉴스》, 2004.06.11.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경향신문》, 2004.06.11.
 “한미FTA 협상 내달 개시, 투자협정 동시 논의”, 《한국경제》, 2004.12.09.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다큐, 내년 1월 개봉”, 《스타뉴스》, 2004.12.29.
 “미, ‘스크린쿼터 비릇 통상현안 진전돼야 FTA 추진’”, 《연합뉴스》, 2005.02.03.
 “문화계,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촉구”, 《아이뉴스24》, 2005.11.07.
 “국회 문광위원들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결의”, 《한겨레》, 2005.11.09.
 “문화다양성 협약을 위해 국회-문화예술인 간담회 열려”, 《조이뉴스24》, 2005.11.09.
 “〈모두발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연합뉴스》, 2006.01.26.
 “스크린쿼터 7월부터 절반 축소”, 《연합뉴스》, 2006.01.26.
 “문화부 스크린쿼터 조정 발표문”, 《경향신문》, 2006.01.27.
 “불붙은 스크린쿼터 논쟁, 영화관 ‘다 망하라는 건가’”, 《이코노믹 리뷰》, 2021.5.31.
 “영화관 업계 ‘스크린쿼터 악몽 현실로… 특수관 예외 적용 필요’”, 《뉴스시스》, 2021.8.23.
 “비싼 영화 값에 발길 줄고 스크린쿼터 압초까지… ‘극장가 고사 위기’”, 《머니투데이》, 2021.8.30.